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경 제 혁 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미주통상과 김정일 과장(203-5650), 윤정원 서기관(203-5651)

미국 무역대표부,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15. 4. 1. (미국시간)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 미국산 제품의 수출에 대한 각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오바마 행정부의 중산층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고 평가함.

*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 매년 3월말경 의회에 제출
  - 2010년부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하였으나 금년에는 NTE 보고서에 통합하여 발간

□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와 유기가공식품 등 각종 개선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평가를 기술했다.

○ (한미 FTA) 한미 FTA는 관세인하 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규제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무역기술장벽(TBT))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협정 체결('14. 7. 1.)의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하위규정, 자동차 수리이력고지 시행, 사이버 보안(네트워크 장비) 적합성 검증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 및 우려를 기술함.

○ (위생 및 검역조치(SPS))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30개월령 미만)가 원만히 이행되고 있으며, 농업 생명공학 규제, 가금류 수출금지 조치, 농약 잔류최대 허용기준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 및 우려를 기술함.

○ (수입정책)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과 현안 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이하 FTA에 따른 농산물 관세인하 및 쌀 관세화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기술함.

○ (서비스/투자/지재권)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해외이전, 법률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개방 등의 진행 상황과 한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기술함.

○ (자동차/의약품 등) 한미 FTA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고시('14. 12.) 등의 진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정책 등과 관련된 미측의 입장과 우려를 제기함.

□ 이번 보고서는 전체 444쪽으로, 유럽연합(EU)(28쪽), 중국(12쪽), 일본(14쪽), 인도(14쪽) 등 분량을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 관련 부분은 12쪽 으로 작년(16쪽) 보다 다소 축소한 수준이다.

□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규범 및 국내 정책에 입각하여 미국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첨부]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요약)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윤정원 서기관(☎ 044-203-56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5년 미 무역장벽보고서 중 한국관련 내용

□ 기술무역장벽(TBT)

분야	주요 내용
화학제품 등록 및 평가 법안	○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년 2월 하위 법령안을 발표하고 2015년 1월 동 법이 발효된 바,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해소 필요
정보기술장비 : 전기안전기준	○ 국표원은 공급자 적합성선언 적용범위의 확대 등 업계 우려를 수용하였으나 일부 우려사항(예: 생산공장별 별도의 안전인증 필요) 상존
정보기술장비 :사이버보안 적합성검증	○ 타회원국의 CCRA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한국정부의 추가검증 요구 및 검증대상 확대, 불투명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 사항을 기술
태양전지판 : 시험 요건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한국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한국 태양광 패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미측은 미국산 박막 태양광 패널의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된 국제기준 도입을 요청 중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제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수리이력 고지제도는 수입자동차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미 업체들은 동 법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지속 관심 중
유기농 제품	○ 2014년 7월 유기가공식품 인증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 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에서 ‘유기농(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하게 됨. 미국은 향후 동 협정의 대상을 농산물 및 식품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관심이 있음

□ 위생검역(SPS)

분야		주요 내용
생명 공학		○ 한국의 농업관련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이 예측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 ○ 생명공학 승인을 위한 자료 요구 수준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종종 신제품에 대한 승인 지연으로 이어짐
식품안전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양국 수출입 업자들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키로 자발적으로 제한키로 한 합의가 현재까지 원만히 이행중이며, 2014년 쇠고기 수출이 전년대비 39.1% 증가하였다고 기술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 2014년 12월, 한국은 미 워싱턴・오레곤州 HPAI 발병에 따라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이는 발병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
	농약 잔류 허용 기준	○ 한국의 농약잔류물질 허용기준은 네거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시스템으로 변경 중에 있으며, 동 과정에서 한국내 사용미등록 농약을 대상으로 새로운 잔류기준을 설정중에 있는 바, 적정 수준에서 시의적절하게 확립될 필요
	감자	○ 한국은 zebra chip 바이러스 발생을 이유로 ‘12.8월 미국 북서부산 신선 감자 수입을 금지한 바 있고, 동 바이러스의 전염 매개체가 되는 해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입금지를 지속중에 있음을 기술

□ 일반 무역장벽

분야	주요 내용
수입정책	ㅇ (원산지 검증) 2013년 한국 관세청이 진행한 원산지 검증 조사와 관련, 2014년 원산지 검증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며 양국간 검증 절차를 상호 조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미측의 우려를 상당 해소하였다고 평가 ㅇ (관세 및 내국세) 한-미 FTA하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 철폐 및 조정관세 부과 정책 등에 대해 기술 ㅇ (쌀) 2014년말, 한국의 최소시장접근(MMA) 합의가 종료되면서 WTO 협정 하에서의 관세화 절차를 진행중임을 언급
정부조달	ㅇ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관련) 타회원국의 CCRA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한국정부의 추가검증 요구 및 검증대상 확대, 불투명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사항을 기술
산업보조금	ㅇ '14년 5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및 산은민영화 계획 중단에 대한 우려 표명
지재권	ㅇ 한국 정부는 강력한 지재권 보호와 이를 위한 강력한 집행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ㅇ 다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사용, 대학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서비스 장벽	ㅇ (스크린 및 방송 쿼터)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에서의 영화・애니메니션・팝음악 등 외국 프로그램 및 컨텐츠 쿼터를 언급 ㅇ (더빙 및 지역 광고)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법 이행지침 중 외국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및 광고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 ㅇ (법률 서비스) 한국 법률시장은 단계적 개방중으로, '17.3월 3단계 개방 예정인 바, 법령 제정 과정에서 협의 또는 의견수렴 절차 등 기대 ㅇ (보험/은행) '13년 금융정보 해외이전 시행 이후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만을 해소 중이나 미 업계는 여전히 모호한 규정과 오랜 승인절차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신용카드/직불카드)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국내 브랜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설명, 국제 브랜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한 차별적 조치 동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 중 ㅇ (인터넷 서비스) 한국은 고해상도 영상 및 관련 지도의 해외반출(storing)을 보안 사유로 금지하고 있어, 미국 업체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 관련 한국 업체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 ㅇ (클라우드 컴퓨팅)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미 이해관계자는 한국에 특수한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음 ○ (특송화물) 한미 FTA에 따라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200불 이하의 특송화물에 대해서 공식적 반입 서류가 요구되지 않으며, 한미 FTA 이행위원회에서 관세청이 보다 무역 촉진적인 관행 도입을 촉구하고 있음을 지적 ○ (소매업)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포함하는 등 미 업계의 영업 확장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미국은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이 한국의 투자 환경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전자 상거래		○ “신용정보보호법” 개선은 평가하나, 한국 소비자들의 신용정보 저장에 제한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감소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제기준 도입 필요성 제기
투자 장벽		○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투자 장벽 제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과세 등 투자 관련 규제 결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 제기 ○ 한미 FTA 이행에 따라 현재 외국인 49% 투자제한이 있는 기간통신 규제가 철폐, 2015년 3월부터 외국인의 방송통신社 소유 가능 ○ 쌀·보리 경작, 발전, 전기 유통 및 판매업, 뉴스 간행 및 출판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존재
반경쟁적 관행		○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 기술, 관련 권한 집행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개입에 대한 미 업계의 우려 존재
기타 장벽	자동차	○ 한미 FTA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에 대해 기술 ○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2021년으로 연기하되 하이브리드/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추진키로 결정('14.9월) ○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개정('14.12월)과 관련, 소규모 제작자 예외 인정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반영되었으나 과도한 목표 수준(97g/km)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동 목표를 유지키로 결정하였다고 기술
	오토바이	○ 한국의 오토바이 소음기준은 최근 몇 년 동안 완화되었다고 평가 ○ 오토바이 고속도로주행금지가 잠재적인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형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을 촉구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미 혁신적 제약업계는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그 예로 2013년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치료재료 상한제 등을 지적함 ○ 미국 정부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의 약가 및 치료재료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